

국회 ‘개점휴업’

개헌·추경·방송법·공수처법

여야 현안마다 날선 대립

국회 파행에 ‘네 탓’ 공방도

여야가 헌법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해서 권력 분산의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헌 시기와 관련,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6월말 국회 개헌안-9월 국민투표’ 개헌로드맵을 발표한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단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어

는 한쪽의 양보 없이는 개헌 협상이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개헌 정국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타결돼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의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놓고도 여야의 선택이 다른데 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개헌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에서 개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개헌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4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법(공수처법)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처리 없이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네 탓’ 공방도 불을 뿜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의 야합에 4월 임시국회가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며 “두 보수야당에게서 국민을 위한 민생과제 해결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4월 국회 일정이 민주당의 뜬금없는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추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방송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억지주장을 펼치며 의사일정 협의에 어긋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공동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정의, 개헌안 이견

靑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에 “국회 책임전가” vs “조속 진행을”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개헌안 협상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에 대한 공동안을 마련하는 것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지도부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양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내주 초 개

헌안 선거구제 개편을 주제로 합동의총을 개최하고, 가능하면 ‘공동 개헌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평화당 한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고, 이는 결국 정쟁만 격화시켜 개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날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개헌안 내용 합의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이와 함께 두 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절충안으로 제시한 ‘국회 총리추천제’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평화당은 총리 추천제를 자체 개헌안에 못 박고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여야 타협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도다. 양측은 전체 개헌안에 대한 견해차는 크지 않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시의원 후보

강진기 “관광활성화 위해 문화관광터미널 조성”



강진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광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구에서 문화관광터미널 조성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문화관광터미널이 조성되면 남도문화관광중심의 허브센터가 될 것이다”면서 “동구에 부동산, 중심사, 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해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시설과 관광, 쇼핑, 버스터미널 기능을 함께 갖춘 문화관광터미널을 조성하겠다”면서 “주요 입주시설은 공연장, 갤러리, 영화관, 특산물 쇼핑점, 음식점, 여행사,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등이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쌍촌사회복지관서 정책간담회



김보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했다.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로 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이용자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8년 동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순회 방문을 통해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으며, 서구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현출 전 남구청장예비후보 “김병내 지지”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사진)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함께 선거에 나섰던 성현출 전 예비후보가 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당 남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병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남구 광역의원에 출마한 김용집·김정기 후보와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조기주·박희을·황경아·김광수·서임석·박상길·김인구 후보 등 9명도 동참했다.

김병내 후보는 “성현출 예비후보와 광주 남구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의 지지 선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 오늘 이후는 누구를 지지했던 우리는 남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교육경비 지원 170억원까지 확대”



재선에 도전하는 주철현 여의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교육경비 지원액을 170억원까지 확대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무상 지원, 지역 고교 졸업자 대학 입학금·등록금 이차 전액 지원, 고교 소규모 운영 지원, 4차 산업혁명 체험관 설립 등을 약속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방정부가 지원해 학생 수 감소로 예상되는 학교 축소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교육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해 더 풍요로운 교 육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든 시민은 지역 교육정책을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최형식 “부자 담양 만들겠다” 3선 도전



최형식 담양군수는 5일 담양문화회관 사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종 현안사업 자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로 ‘부자 담양’을 만들겠다”고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최 군수는 “절단문화복합단지외 일반산업단지 조성, 메타프로방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생 사업, 청년담양 기념사업 등 그동안 추진한 대형사업이 지자체의 물모델이 될만큼 군민과 70여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며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소득 4만달러 시대의 토대를 다지는 등 초심을 잃지 않고 민선 7기 4년이 담양발전의 신호로 기록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천경배, 신안군수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천경배(44)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신안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천 예비후보는 “탄핵국회 이후 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정권교체와 적폐정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낡고 적폐로 가득찬 신안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 당원과 신안군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목포고등학교와 중앙대를 졸업했다. 17대 한병도 국회의원 비서관과 18대 강은태 국회의원실 보좌관, 민선 6기 성남시장(이재명 시장) 대외협력팀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대통령후보 상임선대위 원장 비서실 팀장을 맡았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다.

박우량 “신안 다시 비상시킬 것” 출마 선언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6·13지방선거 신안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군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비상하는 1004의 섬 신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신안의 섬을 추산해 만든 ‘1004의 섬’이 브랜드화됐다”며 “불과 4년 사이 존재감 없는 지자체 중 하나로 전락한 신안을 다시 비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업으로 잘 사는 신안,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양식 산업을 확대하고 농수산업 보조금 제도 개혁, 야간 여객선 운항 확대, 작은 도서 지역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시행, 흑산공항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다.

주경님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재선 도전



주경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주경님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특정 성별이나 일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이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생활형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강력 범죄 ▲교통사고 ▲천재지변(지진, 홍수, 가뭄)으로 부터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의원은 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방송시설 설치 유지관리 조례 등 4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박정욱·오광록·김창화 기자 jwpark@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